

에너지 대전환 ‘젠걸음’...통합된 광주·전남 수혜 받을까

기후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발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지산지소’ 체계 마련
‘햇빛·바람 소득’ 모델 확산...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통합된 광주·전남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서 전력시장 개편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과 주민 참여형 에너지 소득 모델까지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기준 목표를 앞

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전력시장 개편 등이 핵심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비용 구조를 반영해 송전 부담이 큰 지역은 요금을 높이고, 발전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 같은 변화는 통합을 앞둔 광주·전남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기준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은 전남은 208.2%로 전국 최상위권의 ‘공급지’인 반면, 광주는 11.9% 수준에 머무는 대표적인 ‘소비지’다.

두 지역이 하나의 행정·경제권으로 묶일 경우,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가 내부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형태로 재편된다.

특히 에너지 집약 산업의 입지 판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발전 기반이 밀집한 전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 비용을 기반으로 신규 투자 유치 여력이 커질 수 있고, 광주는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 조정 가능성이 있다.

통합 권역 전체로 보면 생산과 소비를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햇빛·바람 소득’ 등 주민 참여형 모델도 확대된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에 국민 1000만명 참여를 목표로 제시했다.

전남도는 현재 ‘햇빛소득마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10가구 이상 마을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유휴부지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점, 수익을 특정 참여자에 한정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공유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규모 발전사업과 달리, 발전 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 남도록

설계됐다.

전남도는 2026년부터 매년 100개씩, 2030년까지 도내 5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

발전 수익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확산될 경우, 농어촌 소득 보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유원호 전남도 에너지산업 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적 지역주도형 사업”이라며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유휴자원을 활용해 주민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이루도록 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전남은 이미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와 해상풍력, 태양광 기반이 구축돼 있어 정책 수혜 가능성이 크다는 평

가다.

정부는 이번 대전환 정책을 통해 전력 공급 구조뿐 아니라 산업 기반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석탄화력발전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소원전체제와 전기 기반 공업 전환 등 제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단순한 발전 비중 확대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연결하겠다는 접근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추진해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면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확보로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햇빛·바람·계통 소득으로 에너지 소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6일 오후 광주 서구 생촌동 광주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서 고광원 광주시장 권한대행과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조선산업 생산공정 AI 전환 속도

산자부 공모 선정...AI 기반 조선공정 혁신 인프라 구축

전남도가 조선산업 생산공정의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낸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I) 지원 기반구축’ 공모에 선정돼 AI 기반 조선공정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계 중심 자동화를 넘어 AI가 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AI(AI Transformation)’ 체계를 도입해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오는 7월부터 2030년까지 총 231억원(국비 100억원 포함)을 투입해 영암 대불자유무역지역에 ‘조선산업 AI 실증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는 실증용 2000㎡, 연구용 500㎡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이 센터는 단순 연구시설이 아닌 실제 조선소 환경을 구현한 공장 규모의 실증 인프라로 구축된다.

선박 블록 생산 전 과정을 재현해 작업

시간, 투입 인력, 불량률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비교·분석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구조다.

조선업은 공정 복잡성과 열악한 작업 환경, 숙련공 의존도가 높은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여기에 중국의 대규모 자동화 투자까지 맞물리면서 산업 구조 전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남도는 AI와 로봇을 결합한 지능형 제조체계 도입을 통해 기존 노동집약적 생산 방식을 개선하고, 자동화율을 높여 작업시간 단축과 품질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현장 실증을 통해 생산성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AI 기반 조선공정 혁신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전남이 조선산업 AI 전조기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정청래 “공천심사·경선 결과 가처분 내면 ‘공천 불복’ 간주”

당헌 ‘불복 행위시 10년간 입후보 금지’ 규정...“재심 때 허위주장도 불이익”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한다는 정청래 대표의 지침을 사·도당에 안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의 명의로 17개 사·도당위원장에게 발송된 ‘재심위원회 운영에 대한 당대표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문에는 “2026년 3월 30일 제25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며 “공천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다.

당헌 제84조의 3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문에는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공천 불복으로 간주해 감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시됐다.

또한 사·도당 재심위원회에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

자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천 불복에 대한 그동안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사·도당의 문의가 있어서 확인해준 것”이라며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이미 그전에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금 살포 의혹에 연루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당의 제명 조치에 대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5월1일 노동절 63년만에 ‘법정 공휴일’ 지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시행 시점은 올해부터로, 법 제정 후 6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을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

뀌어 사용돼왔다.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인사처는 법 개정과 맞춰 ‘공공서비스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후 추후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5·18 헌법 전문 수록 환영”
광주시, 보편적 가치 강조

광주는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140만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결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5·18의 가치가 국가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광주가 지켜온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의 기억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창업, 자금·판로 등 구조적 취약 여전

▶1면에서 인구 구조 또한 한계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령층 중심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혁신 창업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이는 창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성장성 측면에서도 제약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점까지 더해지면서 창업 이후 안정적인 매출 확보 역시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처럼 광주·전남은 단순히 창업 수가 적은 지역이 아니라, 창업이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는 1인 창조기업이 증가하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1인 창조기업 수는 116만 개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으며,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억6640만원, 당기순이익은 362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상거래업(27.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21.2%), 교육서비스업(17.1%)이 뒤를 이었다. 거래 유형은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비중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 동기는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40.0%), ‘직성과 능력 발휘’(36.5%) 순으로 조사됐다.

창업 과정에서는 준비기간이 평균 13.1개월로 나타나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 첫 매출 발생까지는 평균 2.6개월이 소요됐다.

다만 손익분기점 도달까지 약 29.8개월이 걸리는 등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55.1세, 창업 전 근무기간은 16.3년으로 나타나 경력 기반 창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인 창조 기업이 증가하고 매출 등 주요 지표도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광주·전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